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12월 24일 (목)

CONTENTS

-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IB 2020-16)

CONTENTS

- I.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1
- II.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 14
- III.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 24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김창배

편집위원: 임춘건, 이윤식, 나경태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12월 24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12월 4째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일전문인력 양성, 영화업계 지원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ESG가 기업경영, 국제무역 등에서 새로운 질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됨에 따라 통일전문인력도 이에 맞게 개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을 구상해봤습니다. 제3편에서는 코로나 19로 존폐위기를 맞은 영화업계의 피해현황을 진단하고, 업계 생존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1편: ESG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국제 무역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이를 주도하는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환경정의’라는 명분과 내수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제조업 중심 수출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ESG는 경제뿐 아니라 전 사회분야에 걸쳐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까지 수반하는 개념이라 새로운 차원의 무역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 기업들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 개편이 필요함

제2편: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 요구는 물론,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 한편, 한반도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 한반도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대비, 구체적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긴요.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여야 합의의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현황 및 지원방안 (조희문 前 인하대 교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민국 각계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영화업계의 타격이 심각. 영화계는 제작 중단, 개봉 연기, 극장 운영 저조 등으로 업계 조성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 특히, 영화 관객수가 지난해 대비 30% 수준으로 격감한 점은 이번 영화산업 위기의 주요원인이 유통 경색이라는 점을 방증. 그럼에도 정부는 영화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은커녕 스스로 생존하라는 식으로 영화업계를 사실상 방치. 이에 다른 위기산업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 특히 영화인, 극장업계 등에 긴급지원 자금 유통에 대한 논의가 필요

II.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작성: 이윤식 정치외교안보실장 (lee.youn.seek@ydi.or.kr)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 요구는 물론,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 한편, 한반도 통일이란 민족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현 한반도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한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대비, 구체적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긴요.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해 관련 정책연구 및 학술회의를 개최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아울러 국회도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여야 합의의 특위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야 함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2016.1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은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
- 원래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독일 「High-tech Strategy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걸 의미했으나, WEF가 “4차 산업혁명”이라 언급하며 화두로 등장
- 인공지능(AI), 가상현실,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딥러닝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도 지칭

- 즉, 초산업에 걸쳐 각종 자료를 핵심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기존 역량을 연계해 기술진보와 미래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요구
- 4차 혁명이 주도하는 미래사회의 특징은 경제·사회 구조의 융·복합적 변화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일상화되는 “예측 불허의 세상”
- 지역과 국가를 넘나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공유경제 같은 효율성 증가란 장점뿐만 아니라, 일상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
 - 글로벌화는 새로운 상호의존을 발생시켜 어떤 결정이 개인과 국가 공동체를 넘어 초지구적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영향을 초래
 - 이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기후변화, 환경오염,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
-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술진보가 고용시장 및 노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지형의 획기적 변화로 이어짐
- AI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하고, 현 플랫폼 기반의 기업 운영과 고용 및 공유경제 확산 등으로 기존 노동관계에서도 획기적 변화가 발생
 - 독일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부문 120,000개(4%), 품질관리 20,000개(8%) 및 유지 부문 10,000개(7%)의 일자리가 감소
 - ※ 미국에서도 기술진보에 따라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47%가 컴퓨터로의 대체 확률이 0.7 이상인 고위험군 직종에서 나타남
 - 반면, 긍정적 전망도 있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도 존재

※ GE(2016)는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성 높은 분야에서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65%가 신생직업이 될 것으로도 전망

〈표 II-1〉 국가별 미래사회 변화 동인

구분	주요 변화 동인
독일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급망, 자가조직화 기술 등
영국	바이오 및 나노 테크놀로지, 가상현실, 홀로그램, 3D 프린팅 등
미국	클라우드, 자동화기술, 센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3D프린팅,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호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 출처: *Technology,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Work in Europe*(Oxford Univ., 2015).

2. AI시대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명적 진보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직무역량 변화와 직업훈련 등 매우 구체적인 영역으로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
- 한반도 통일이란 숙원을 품고 있는 우리로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
 - 물론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간 교류협력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더욱 긴급
 - 이에 통일준비는 여러 차원(남북간 역량강화, 국내적 역량강화, 통일 외교 역량강화 등)에서 이뤄져야겠지만,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선 ‘국내적 역량강화’와 ‘통일외교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함

- 특히, 상기 3가지 차원 중 국내적 역량강화를 위해선 4가지 부문의 개별 성과 및 부문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 조화가 필요¹⁾
 - 4가지 부문에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비용 및 재정 확보, △법·제도적 기반의 완비, △통일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등
 - 무엇보다 통일은 국민의 열정이 총합 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민족적 과업인 바, 제도통일 및 국가통합 과정을 순조롭게 관리해 나갈 통일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이 필수
- 통일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선 3단계 과정이 조화롭게 선순환 되면서 순차병행되어 나가야 함
 - 첫째, 어느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수요 예측과 그를 뒷받침할 “지표화된 매뉴얼 구축”이 필요
 - 둘째, 전문인력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양성·관리할지, 또 기존인력의 활용 및 신규인력의 보완을 위해 어떻게 균형적으로 인원을 조정할지에 대한 “종합적 양성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
 - 셋째,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들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등의 활용방안을 완비한 접근이 필요
- 그런데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안 어디에도,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통일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예측 조사도 이뤄져 있지 않다는 점
 - 이에 통일전문인력의 수요 예측부터 양성 및 활용에 이르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초 자료를 위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

1) 이윤식, “통일 공론화 사업의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통일준비위원회, 2015) 참조.

3. 통일전문인력의 개념 및 유형 구분

- ‘통일에 대비’한다는 건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남북간, 대내적, 대외적 차원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
 - ‘전문인력’이란 “정부가 △통일준비 단계, △통일 직후 단계, △통일 후 통합 단계 등 시기별로 활용할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된 전문인력들의 수요”를 의미
 - 이렇게 볼 때, ‘통일전문인력’이란 “통일 관련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통일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거나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적 자원의 총체”를 의미
- 우선, 통일전문인력의 수요를 시기별로 세분화해 보면 크게 3시기(통일 준비기, 통일 직후기, 통일후 통합기)에 인력 소요가 예상²⁾
 - 통일 준비 단계: 현 시점부터 남북이 제도 통일을 이루고 법적으로 단일 국가를 선포하는 직전 단계까지 분야별 소요 예상 인력
 - 통일 직후 단계: 남북이 단일 국가를 선포한 직후,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중대한 현안들을 다룰 인력 소요
 - 통일 후 통합 단계: 통일 이후 사회통합 및 국가 정체성 회복과정에서 분야별로 소요가 예상되는 인력
- 다음, 소요 인력을 기능적으로 분류해 보면, 3가지 정도로 유형화(실무 인력, 핵심 인력, 공공 인력)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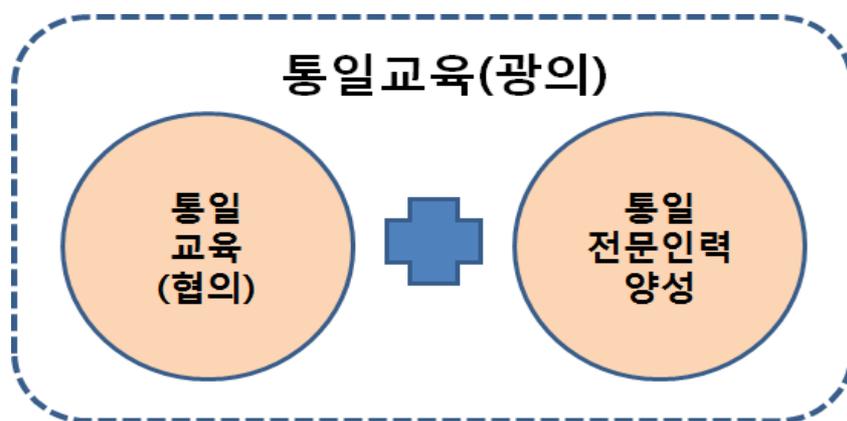
2) 전영선,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통일부, 2015) 참조.

- 현장(실무) 전문인력: 남북교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서 북한의 새로운 정보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인력
- 핵심(정책) 전문인력: 남북 사이에 진행될 각종 협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 공공 전문인력: 정부 부처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북한 업무 담당자로 각 단계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

4. 통일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프로그램(안)

- ‘통일전문인력 양성’은 “일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 통일대비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라고 지칭해 볼 수 있음
- 일반 국민 대상의 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으로, 통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통일전문인력 양성’으로 구분하여 명명

[그림 11-1] 통일교육과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의 관계



*출처: 박영정, “통일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2016).

- ‘통일전문인력 양성’도 광의의 ‘통일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분 필요

-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은 각 분야별 전문인력이 통일전문인력이란 개념 속에서 재구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통일국가 초기(3년 내)의 제도통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 통일과정에서 전문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기
- 둘째, 통일준비 단계에서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정도 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
- 셋째, 통일 쏠과정에서 중요한 토대는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형성. 통일교육이 이뤄지게 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

○ 상기 방향에서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① 통일전담 행정인력 양성, ② 분야별 통일전문인력 양성, ③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④ 대북사업 전문인력 양성의 네가지 프로그램의 추진을 제안³⁾

① “통일업무 전문 행정인력 연수” 프로그램(안)

- 성격: 통일부 및 각 행정기관(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통일전담 행정인력(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연수’ 프로그램
- 방향: 현행 통일교육원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운영하되 각 행정기관과 협업 방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사업 예시: △통일교육원 프로그램 지속적 확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

3) 박영정, “통일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통일부, 2016년 4월) 참조.

② “분야별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안)

- 성격: 분야별 전문가를 통일전문인력으로 재육성하는 프로그램
- 방향: 정부 부처나 민간 협회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참가자 선발 및 관리 등) 담당. 수요가 있고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시행
- 사업 예시: △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통일교육원, 문체부, 예술단체 협업), △의료분야 전문인력 양성(통일교육원, 복지부, 보건의료단체 협업), △문화유산분야 전문인력 양성(통일교육원, 문화재청 협업) 등

③ “통일교육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안)

- 성격: 학교, 대학, 사회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 방향: 통일교육원과 교육기관의 협업으로 운영하되, 신규인력 양성은 교육기관에서, 기존인력 재교육은 통일교육원에서 담당
- 사업 예시: △학교통일교육 담당하는 교사 연수, △대학통일교육 담당하는 교수강사 연수, △사회통일교육 담당하는 강사 연수 등

④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안)

- 성격: 대북사업 현장인력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 방향: 남북교류협력 관련 부처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통일교육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사업 예시
 - ‘(가칭)남북개발협력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남북 민생통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가칭)남북문화교류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남북 문화통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가칭)남북생태협력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남북 환경통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5. 결론 및 고려사항

- AI시대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이후 한반도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통일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준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
 - 즉, 우리 국민 중 10명 중 7~8명은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함에도 제도통일과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구체적 과정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정
 - ※ 통일인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란 의견은 70% 이상임에도, “어떤 통일을 원하는지”, “통일 비용은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등 구체적 항목에선 의견이 분분
- 이에 통일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정책 연구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함
 - 정책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통일교육원의 기능 확대 재편, 통일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마련 및 확보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

- 아울러 통일전문인력 양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통일교육원이 허브 역할을 수행하되, 다른 교육기관이나 각 분야별 전문가 협회, 대북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
- 따라서 정책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인식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진 정책 수행 및 관리가 필요
- 마지막, 국회 차원에서는 우리의 숙원인 통일은 여야를 뛰어 넘는 민족적 과제인 바, 여야 동수의 관련 특위를 구성해 법제도를 정비 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가야 함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민의힘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